

현대차, 글로벌 악재에도 거뜰... 매출액 142.5조 '신기록'

영업이익 9조8198억으로 늘어
총 판매량 394만2925대 기록
올해 전기차 판매목표 83만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현대차는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경영실적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이 142조527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1.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9조8198억원으로 47.0% 늘었다.

우호적인 환율 여건과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대 기록은 매출의 경우 2021년에 기록한 117조6106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012년 8조4406억원이었다.

순이익은 전년 보다 40.2% 증가한 7조9836억원, 총판매량은 394만292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올해 부품 공급 개선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제네시스 SUV 등의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에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현대차 아이오닉 6.

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 자동차 시장 수요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대기 수요 등으로 판매량 성장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우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판매목표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83만대로 설정했다”며 “주요 신차로는 신형 코나 E

V와 아이오닉 5N 등이 있으며, 아이오닉 6가 글로벌서 본격적으로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공급 이슈와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보였다”며 “올해 전기차 시장은 부품 공급 이슈 등에서 비교적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둔화와 보조금 축소, 금리인상 등으로 수요는 제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권역별 전기차 신차 출시 시점도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상반기 신형 코나 EV를 출시한다. 유럽에서는

1분기부터 아이오닉 6의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신형 코나 EV와 아이오닉 5N은 하반기 출시된다. 미국에서도 1분기 아이오닉 6를 출시하고 하반기 신형 코나 EV를 내놓는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회피를 위해 5% 미만이었던 리스(임대)차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리스로 인해 하락이 우려되는 중고차 가격 방어를 위해 인증 중고차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아이오닉5

의 미국 판매를 올해 3만6000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대차는 2024년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 전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순의 창출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생산, 배터리 소싱(대의 구매) 등 다방면을 검토해 조지아 공장의 조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IRA 관련 대응은 구체적인 법안이 발표되는 3월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2023년 연간 기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하며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양산 차종 수 증가, 미국 조지아 신공장 건설 본격화 및 지속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올해 ▲R&D 투자 4조 2000억원 ▲설비투자(CAPEX) 5조 6000억원 ▲전략투자 7000억원 등 총 10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실적 호조를 반영해 2022년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주당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연간 배당은 중간 배당 1000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주당 7000원으로 책정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급매 문의 늘었지만 실제 거래는 아직”

부동산 현장 르포

(2) 서울 월계동 아파트

정부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기대감
이자 부담 줄어야 거래절벽 해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늘긴 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찾아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 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와는 별개로 금리인상이 마무리 되는 등 이자 부담이 줄어야 거래절벽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하철 1호선과 경춘선을 환승할 수 있는 광운대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월계시영 아파트는 미성, 미룡, 삼호3차 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이른바 ‘월계 미미삼’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는 최저 5층~최고 14층, 32개동, 총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 8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매매가격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서울 노원구 월계동 미룡아파트. /김대환 기자

35%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45%)보다 0.10%포인트 축소되면서 3주 연속 하락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집중된 노원구(-0.70%→-0.39%), 도봉구(-0.77%→-0.44%), 강북구(-0.45%→-0.37%)도 하락폭이 축소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했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미성’은 이달 전용면적 50㎡가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거래가격(5억8500만원) 대비 2000만원 올랐다. 같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3차 아파트.

면적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1월 2억4000만원에서 이달 2억5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승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삼호3차’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59㎡가 6억475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거래가격(7억원) 대비 5250만원 떨어졌다. 같은 면적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2억7000만원에서 이달 2억3000만원으로 4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월계시영의 경우 상계주공 등 주변 재건축 예정 단지보다 대지분비 커서 사업성이 좋다”면서 “현재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거래량과 매매가격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은 광물세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회복을 보이겠지만 향후 집값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김대환 기자 kdh@

당정, R&D 투자 촉진... 조세감면 등 추진

국민의힘, 민·당·정 협의회 개최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활용 등 요청

산업계 연구개발(R&D) 투자 촉진 차원에서 민·당·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국회와 기업, 정부 관계자가 함께 R&D 투자 애로 사항에 대해 듣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협의회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고광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김택중 OCI 대표, 박영태 캄시스 대표, 이성진 이노랩 대표, 최근수 딜리 대표, 김왕한 한국에너지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올해 정부 R&D 예산안 30조원이 기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업의 주요 요청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업 측은 ▲R&D 투자 활력 제고 차원의 조세 감면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 추진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활용 및 중소기업 연구 인력 확보 등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요청한 조세 감면과 관련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

분에 대해 50%까지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8% 밖에 안돼서 어렵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면 추가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과 관련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R&D 비용을 많이 갖고 있어 연구 단체에 직접 방문해 R&D 규모 및 방향, 필요한 기술 모든 것들을 함께 토론했다”고 화답했다.

전문 연구 요원 제도에 대해서도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계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많이 해서 연구소에 상당한 어려움 있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라며 “노동부에 병역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일을 더 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대학, 대학원 졸업 후 취업하는 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해도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는 게 (기업 측 입장)”이라며 “기업 채용 전 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158억원 정도 있어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은 기업 연구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안을 당 소속 김영식 의원이 발의하기로 한 점도 소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가 잘 되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